

군산시의회 의정소식지



시민과 함께, 군산시의회

Vol. 2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하다



PARLIAMENTARY POLITICS NEWS

CONTENTS

의정활동

- 5 1. 발간사, 인사말
- 10 2. 의회조직 및 구성
- 16 3. 주요 의정활동(2023년 7월 ~ 2024년 3월)
 - 16 (1) 의사일정
 - 17 (2) 의정활동
 - 17 - 1) 의원발의조례안
 - 22 - 2) 5분발언
 - 26 - 3) 성명/건의/결의안
 - 39 - 4) 시정질문
 - 40 - 5) 주요의정활동
 - 52 - 6) 국내외교류
 - 54 - 7) 의정활동 사진첩
 - 72 (3) 의원칼럼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하다 특집

- 75 1. 새만금관할권 대응 및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활동
(2024년 1월 ~ 2024년 5월)
 - 75 (1) 총괄대응일지
 - 81 (2) 주요활동
 - 81 - 1) 새만금 관할권 관련 기자회견문
 - 84 - 2)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적극 건의
 - 90 - 3)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칼럼
 - 96 - 4) 보도자료

의정활동

1. 발간사, 인사말
2. 의회조직 및 구성
3. 주요 의정활동(2023년 7월 ~ 2024년 3월)

- (1) 의사일정
- (2) 의정활동
 - 1) 의원발의조례안
 - 2) 5분발언
 - 3) 성명/건의/결의안
 - 4) 시정질문
 - 5) 주요의정활동
 - 6) 국내외교류
 - 7) 의정활동 사진첩
- (3) 의원칼럼

추진사항 결산(2022.7.~2024.3.)



발간사

“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

제9대 군산시의회의 지난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소식지 <knock knock 군산> 2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제9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제9대 전반기 의회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로서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 우리 군산의 발전과 나아가 새만금 관할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군산 그리고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심없이 달려왔습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새만금 관할권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모든 정치권, 사회지도층, 시민들이 다시 한번 뚝뚝 뭉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열린의정,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군산시의회 의장 김 영 일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 소식지 <Knock Knock 군산> 2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제9대 군산시의회가 어느덧 출범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Knock Knock 군산>에 군산시의회 23명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모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고, 시민 생활 속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해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정 소식지는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만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새만금의 중요성과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산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민 소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군산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우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입니다!

군산시의회 소식지 <Knock Knock 군산>을 통해 군산의 주인인 시민들과 소통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9대 군산시의회는 개원 이래 2년간 시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의정소식지는 그간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알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한발 더 다가서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의 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앞으로도 23명의 군산시의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입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담은 <Knock Knock 군산>2호의 발간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들 모두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월명수영장을 현장 방문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쓰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하게 듣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박 광 일**



사랑하는 군산시민여러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는 군산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의 지난해 재정자립도 평균치가 10.9%로 전국 평균인 4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이야말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새만금의 미래는 시의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큰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이번 군산시의회 의회소식지 <Knock Knock 군산>을 통해 그간 군산시의회의 새만금뿐 아니라 다양한 의정활동을 시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고, 군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시민여러분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 종 대**



2. 의회조직 및 구성

군산시의회는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과 의회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 윤리 등 2개 상설 특별위원회와 시의회사무처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제9대 전반기 군산시의회 원구성

→ 의장단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 장		부 의 장	
	김영일 (다 선거구·임파·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더불어민주당 063)450-5700		김우민 (아 선거구 - 나운3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02

→ 상임위원회

군산시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각종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3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별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의회운영위원회(7명)	최창호	윤세자	서은식, 김영자, 박경태, 윤신애, 지해춘
행정복지위원회(11명)	박광일	윤신애	서은식, 우종삼, 김영란, 송미숙, 최창호, 김경식, 김우민, 서동완, 이연화
경제건설위원회(11명)	나종대	박경태	김경구, 서동수, 설경민, 이한세, 김영자, 지해춘, 한경봉, 양세용, 윤세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 전체의 전반적인 의사일정 조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며, 의장단, 교섭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최창호 (바 선거구-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8		윤세자 (비례대표) 국민의힘 063)450-5738
위원			
	서은식 (나 선거구 - 해산·소룡·미성·신평·삼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9		김영자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2
	박경태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1		윤신애 (바 선거구 - 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1
	지해춘 (사 선거구 - 나운1·나운2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7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 감사, 자치행정, 문화관광, 복지환경, 보건, 시설관리, 읍면동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 및 회계를 비롯한 시책사업과 기획분야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박광일 (마 선거구 - 월명·홍남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0		윤신애 (바 선거구 - 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1
위원장			
	서은식 (나 선거구 - 해신·소룡·미성·신평·삼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9		우종삼 (나 선거구 - 해신·소룡·미성·신평·삼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7
	김영란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3		송미숙 (마 선거구 - 월명·홍남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6
	최창호 (바 선거구 - 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8		김경식 (사 선거구 - 나운1·나운2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5
	김우민 (아 선거구 - 나운3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02		서동완 (아 선거구 - 나운3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4
	이연화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063)450-5712		

➔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항만, 안전건설, 농업, 수도, 차량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창출, 도시계획수립, 도시안전 및 재난관리, 공원녹지 관리, 주거환경개선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나종대 (바 선거구 - 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01		박경태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1
위원장			
	김경구 (가 선거구 - 옥구·옥산·회현·옥도·옥서면) 더불어민주당 063)450-5734		서동수 (가 선거구 - 옥구·옥산·회현·옥도·옥서면) 더불어민주당 063)450-5736
	설경민 (나 선거구 - 해신·소룡·미성·신평·삼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3		이한세 (다 선거구 - 임파·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더불어민주당 063)450-5735
	김영자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2		지해춘 (사 선거구 - 나운1·나운2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7
	한경봉 (사 선거구 - 나운1·나운2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9		양세용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063)450-5740
	윤세자 (비례대표) 국민의힘 063)450-5738		

3. 주요 의정활동

2023년 7월 ~ 2024년 3월

(1) 의사일정

➔ 2024년도 군산시의회 운영계획안

회기별	기 간	회의일수	주 요 내 용
제261회 임시회	1. 24.(수) ~ 2. 5.(월)	13	○ 부의안건 처리 ○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집행부(市) 신년인사회 1월~2월중 ※ 졸업식 : 1월 초, 2월 초 ※ 설 연휴 : 2. 9.~2.12.
제262회 임시회	3. 8.(금) ~ 3. 13.(수)	6	○ 부의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5.31.까지 의회에 결산서 등 제출
제263회 임시회	4. 16.(화) ~ 4. 19.(금)	4	○ 부의안건 처리 ※ 국회의원 선거 : 4.10.
제264회 제1차 정례회	6. 10.(월) ~ 6. 20.(목)	10	○ 부의안건 처리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2023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265회 임시회	6. 27.(목) ~ 6. 28.(금)	2	○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제266회 임시회	7. 4.(목) ~ 7. 16.(화)	13	○ 부의안건 처리 ○ 특별위원회 구성(예산결산, 윤리) ○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제267회 임시회	8. 27.(화) ~ 9. 5.(목)	10	○ 부의안건 처리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추석연휴 : 9.15. 9.18.
제268회 임시회	10. 15.(화) ~ 10. 25.(금)	11	○ 부의안건 처리 ○ 2024 업무실적 및 2025 주요업무계획 보고 * 한글날 : 10. 9. 10월초:시간여행축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1. 13.(수) ~ 12. 20.(금)	38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9일간) ○ 결산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 총 회의일수: 9회 / 107일(정례회 48일, 임시회 59일)

(2) 의정활동

1) 의원발의 조례안

연번	회 기	의 안 명	발 의 의 원
1	제257회 임시회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우민 의원
2	제258회 임시회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3	제258회 임시회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숙 의원 (박광일 의원)
4	제258회 임시회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5	제258회 임시회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김영자 의원)
6	제258회 임시회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영란 의원
7	제258회 임시회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 (김영란 의원)
8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
9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 의원 (양세용 의원, 설경민 의원, 김경구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일 의원, 윤신애 의원)
10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동완 의원 (김경식 의원)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11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12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김영자 의원)
13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이한세 의원 (김경구 의원, 나종대 의원, 서동수 의원)
14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윤세자 의원 (양세용 의원, 김영자 의원, 김영란 의원, 나종대 의원, 지해춘 의원)
15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
16	제259회 임시회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구 의원 (박광일 의원, 서동수 의원, 이한세 의원)
17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수 의원 (나종대 의원, 윤세자 의원)
18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19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20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21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세 의원 (나종대 의원, 설경민 의원)
22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숙 의원 (김영란 의원)
23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란 의원 (김영일 의원, 송미숙 의원)
24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연화 의원 (박광일 의원, 윤신애 의원)
25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연화 의원 (박광일 의원, 윤신애 의원)
26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윤세자 의원 (지해춘 의원, 나종대 의원)
27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태 의원 (나종대 의원, 지해춘 의원)
28	제260회 2차 정례회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29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
30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 (박광일 의원)
31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란 의원 (김영일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양세용 의원)
32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33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34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김영자 의원)
35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36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37	제261회 임시회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
38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이한세 의원 (나종대 의원, 지해춘 의원)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39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 (박광일 의원)
40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세 의원 (한경봉 의원, 지해춘 의원)
41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수 의원
42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구 의원
43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구 의원
44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란 의원 (김영일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최창호 의원, 서은식 의원, 김우민 의원)
45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46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
47	제262회 임시회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신애 의원 (김영일 의원, 나종대 의원)
48	제262회 임시회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

2) 5분발언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1	제257회 임시회 1차	군산시는 한심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2) (‘오성인의 묘’인가? ‘삼성인의 묘’인가?)	 한경봉 의원
2	제257회 임시회 1차	매달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군산시민은 과연 안전한가?	 우종삼 의원
3	제257회 임시회 1차	올해 장마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까?	 윤세자 의원
4	제257회 임시회 2차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진입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	 지해춘 의원
5	제257회 임시회 2차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라	 한경봉 의원
6	제257회 임시회 2차	1인 2주소제 도입으로 군산시 인구정책에 활력을~!	 송미숙 의원
7	제257회 임시회 2차	일제강점기 최대의 혜택? 아픈 역사의 상처,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제언	 윤신애 의원
8	제258회 임시회 1차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군산시의 대책 마련 촉구	 박경태 의원
9	제258회 임시회 1차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통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하자	 김경식 의원
10	제258회 임시회 1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3) (군산시의 행정은 고무줄인가?)	 한경봉 의원
11	제258회 임시회 1차	위기임산부와 위기아동을 위한 선도적 지원 촉구!	 서동완 의원
12	제258회 임시회 1차	군산시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	 양세용 의원
13	제258회 임시회 2차	청소년 마약, 예방이 최선입니다!	 김영자 의원
14	제258회 임시회 2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4) (추석 선물 20억?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15	제258회 임시회 2차	맨발 걷기의 명수로(路) 조성을 통한 건강과 관광 일석삼득!	 서은식 의원
16	제259회 임시회 1차	군산시 나운동 임야 공동주택 완화 승인 특혜 아닌가?	 서동완 의원
17	제259회 임시회 1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5) (100억 인도교, 건널 수 없는 다리)	 한경봉 의원
18	제259회 임시회 2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6) (‘어린이 보호구역’ 과연 안전한가?)	 한경봉 의원
19	제259회 임시회 2차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군산시를 만들자!	 김영자 의원
20	제259회 임시회 2차	미래세대에 전할 소중한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자	 우종삼 의원
21	제260회 2차정례회 1차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해야	 이한세 의원
22	제260회 2차정례회 1차	군산시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인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	 송미숙 의원
23	제260회 2차정례회 1차	군산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이뤄내자!	 윤신애 의원
24	제260회 2차정례회 1차	스토킹에 대한 방지책 마련 촉구	 윤세자 의원
25	제260회 2차정례회 1차	군산시의회 어쩌다 이런 일이..!(1) 내 교육비는 어디로 갔나?	 한경봉 의원
26	제260회 2차정례회 1차	군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라!	 설경민 의원
27	제260회 2차정례회 2차	군산시 집행부의 입법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이연화 의원
28	제260회 2차정례회 2차	청암산 미래숲 조성으로 군산을 세계적인 포레시티로 만들자	 김경구 의원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29	제260회 2차정례회 2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일이..!(7) 군산 차인회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한경봉 의원
30	제260회 2차정례회 3차	군산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마치고...	 윤신애 의원
31	제260회 2차정례회 3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일이..!(8)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한경봉 의원
32	제260회 2차정례회 4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일이..!(9) 군산시는 비굴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한경봉 의원
33	제260회 2차정례회 4차	군산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청사 실내금연 사항을 준수하라	 서은식 의원
34	제260회 2차정례회 4차	상상도서관 건립을 환영합니다!	 윤신애 의원
35	제260회 2차정례회 5차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	 김영자 의원
36	제260회 2차정례회 5차	군산시 수산식품 소비촉진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종삼 의원
37	제261회 임시회 1차	49명도 대비하지 못하는데 인구증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연화 의원
38	제261회 임시회 1차	군산시는 '문화도시 공모사업 탈락 사태'를 반성하고, 공모사업 탈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김영자 의원
39	제261회 임시회 1차	수상한 조경업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김경구 의원
40	제261회 임시회 1차	청렴도 낙제점 군산시의회, 일당이 독점하면 부패한다	 윤세자 의원
41	제261회 임시회 1차	신영대 국회의원은 당장 사과하라	 한경봉 의원
42	제261회 임시회 1차	우리는 민주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은식 의원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43	제261회 임시회 2차	관내 유희 부지와 유희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자!	 지해춘 의원
44	제261회 임시회 2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일이..!(10) 군산 정치권의 거짓, 꼼수정치를 중단하고 시민 앞에 진실해지자	 한경봉 의원
45	제262회 임시회 1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일이..!(11) "사용할 수 없는 신축 화장실"	 한경봉 의원
46	제262회 임시회 2차	장애인 통계조사를 통한 군산시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 발굴!	 김영자 의원
47	제262회 임시회 2차	급증하고 있는 관내 포트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지해춘 의원
48	제262회 임시회 2차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일이..!(12) 목숨 걸고 걸어야 하는 보행자 통행시설	 한경봉 의원
49	제262회 임시회 2차	군산의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 도시기본계획이 문제다	 윤세자 의원



3) 성명·건의·결의안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257회 임시회 **설경민** 의원

정부가 2022년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군산시에도 산복동 하나리움시티 임대 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하여 전북도에 신청하였다며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약칭)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었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전공공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 마련할 것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제258회 임시회 **한경봉** 의원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이라 한다)사고로 인하여 45명이 사망하고,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PM 대여사업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어 업체들이 난립하고, 거치구역 없이 보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방치되어도 처분할 수 없고 만 16세 미만 아동과 무면허 이용자가 면허 인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고 지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없이 가결 처리할 것 ▲정부는 PM 관련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된 업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제258회 임시회 **서은식** 의원

군산 지역의 경우 최근 매달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는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 점검 등 지자체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대부분 환수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현황 및 대응 능력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취급시설 입주 심사 시 환경성 검토 등 직접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 이양 및 위임 범위가 서로 달라 위급 사태 시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참혹한 피해는 언제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므로 화학사고 재발방지과 오염물질 배출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군산·새만금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사전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영세 중소기업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즉각 시행할 것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고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정부는 산단 인근 주민의 안전과 군산·새만금산업단지의 화학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화학물질의 56%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설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

제258회 임시회 **윤신애** 의원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 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현실화 할 조짐이 보인다며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위기를 극복할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고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공동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새만금 SOC 사업 과정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 ▲정부는 정치 공세에 편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전세계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답할 것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알려 나갈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를 구성할 것 ▲전라북도는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은 전북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258회 임시회 **한경봉** 의원

1995년 7월,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기관대립형 구조에 기초하여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르면 기존 지방 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으나 의회 사무조직 내 인사 권한만 분리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조직 운영에 대한 재원과 공무원 정원은 집행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한계에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는 지방 의회직렬을 신설할 것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

제258회 임시회 **서동완** 의원

군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토론회」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31일 군산문화도시 추진단 출범, 2020년 12월 16일 군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1년 12월 예비문화도시 선정, 2022년 3월 군산문화도시센터 설립 등 6년 가까운 시간과 27개 읍면동 주민 1만여 명이 정성을 모아 문화도시를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심사를 1달 남기고 돌연 제5차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되어 예비문화도시로 심사 대상이었던 16개 도시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두들겨 맞은 심정 이라고 성토했다.

이에▲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들이 정당하게 심사받고, 시민들은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 조속히 심사를 재개할 것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이 불가하다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13개소 중 기존 7개소 지정과 별개로 추가되는 6개소는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 만의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조속히 공식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제258회 임시회 **윤신애** 의원

정부가 2024년도 새만금 SOC 예산안으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 각부처 안에 반영된 새만금 예산 6,62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한 것이라며 전북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데 그치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까지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며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온 사업이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30여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는 개발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제258회 임시회 **양세용** 의원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 모두가 이뤄낸 결실이자 위대한 승리였으며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었다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현 정부는 이러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전의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 그리기라는 미명하에 가혹하게 짓밟았다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 대회 추진과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없던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며 원안대로 군산공항이 갖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고 멈춰있는 새만금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달아줄길 바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군산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이 원안대로 정상 건설될 때까지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잼버리를 연계하여 발목 잡는 악의적인 정치행태에 강력 규탄, ▲정부는 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새만금의 성장동력을 무너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멈추고 새만금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할 것 ▲새만금 국제공항 또한 타 지역 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

제259회 임시회 **윤신애** 의원

새만금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들끓는 분노와 달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며 2023년 1월 우리 군산시의회가 건의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구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 삭감, 기본계획 재수립, 적정성 재검토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새만금 개발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권한도 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데 활용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 ▲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권 분쟁 중재에 나설 것을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촉구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259회 임시회 **이한세** 의원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 재정 확충,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하였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져 상대적 박탈감 및 지방소멸 위기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 모금 홍보 금지행위로 지정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을 허용할 것 ▲ 연간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제한 등 제도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제259회 임시회 **서은식** 의원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산발적인 해충의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군산 지역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식량작물, 특히 벼의 생육에 있어 이삭(목)도열병, 깨씨무늬병, 흑명나방 등의 피해가 발발하는 가운데, 2020년부터 이화명충이 단계적·집중적으로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에 의거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병충해 방지목적으로 행해지던 소각이 금지된 이후 2019년도를 기점으로 확산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군산시에서는 21년 공식10ha (비공식150ha), 22년 400ha, 23년 9월 500ha로 산단 지역 열대자마을 주변 논 약 1,240ha를 중심으로 이화명충에 대한 밀도가 점점 높아지며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식량안보와 농업보호 차원에서 ▲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이화명충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확산되는 해충 피해를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는 대안 없이 금지한 논·밭 소각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메뉴얼을 강구할 것 ▲ 정부는 변이 기생하는 해충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이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

제259회 임시회 **김우민**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군산 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군산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인구가 증가 추세지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3명보다도 적은 2.06명에 그치고 있어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인프라 축소와 인구유출, 지방소멸 가속화가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의료 취약지 및 지역에 남아 활동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 대학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 나이, 성별, 주거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 ▲ 의료인프라 축소가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립군산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것 ▲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 대학을 신설하여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메우고, 도서 지역 등 의료사각지대 의료 안전을 보장할 것 ▲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서해안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의료 응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 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서은식 의원

앞으로 이차전지특화단지에도 관련된 사업장들의 입주는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고 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지만 2023년 2월 28일 문을 연「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아직 특수재난 전담조직이라 불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지휘차, 화학구조차, 고성능화학차, 다목적제독차, 무인 파괴방수차, 다목적굴삭기, 예방점검차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다목적 제독차, 장비운반차, 고성능화학차, 구조차 등 4대만 보유하고 있고 둘째,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르게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기체 분석 장비가 시급하며 셋째,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과 화학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 필요 넷째, 현 인력은 28명이지만 내년에 전북소방본부 특수사고 대응조직이 신설되면 3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군산소방서 화학119 구조대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수준의 출동 차량을 확보할 것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화학물질 측정 장비 및 예방 목적의 배관 측정 장비를 즉각 확보할 것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군산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 및 화학사고 대비 교육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것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화학 관련 사고에만 출동하고 예방 목적의 점검, 교육, 훈련 등에 집중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전라북도지사와 전북도의회에 촉구했다.



”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건의안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한경봉 의원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기준이 강화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는 연중 24시간 30km로 제한되고 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대한 교육기관이 추가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어린이의 통행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주말, 명절, 휴일과 새벽, 저녁, 심야 시간까지도 모두 24시간 내내 일률·고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물류 및 운송체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마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거나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고 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군산시의회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획일·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이한세 의원

2017년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방류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 등을 볼 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은 원료반입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임이 틀림없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이야말로 단순 예방을 위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폐수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경 관련법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업들이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단지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폐수 공동 직방류관 설치를 통한 바다방류 처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EU 등의 행보에 발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맞는 방류 전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업의 폐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전용 폐수처리장 대책을 기업 가동 전에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 전라북도 등에 촉구했다.



”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서은식 의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는 갈등만 심화되어 가고 있다며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갈등 조정을 요청하였고, 도는 드디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용하였지만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이 협의회의 근거인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첫 회의를 앞둔 시점에 불참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인구소멸 시대에 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길을 찾고 또한 새만금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건설'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김제시는 새만금 예산회복과 갈등 상황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동참할 것 ▲전라북도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온전한 개체를 위하여 김제시에 동참을 촉구할 것을 김제시와 전라북도에 촉구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도 정비와 시설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김경식 의원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만 살펴봐도 매년 약 14만5천 톤, 91만1천870개로 이중 플라스틱은 약 13만 3천톤, 84만895개로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8년 만에 약 24배가 급증한 수치로 해양쓰레기 전체 수거량인 12만 6,035톤임을 감안해 봤을 때, 2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해마다 수거되지 못하며, 어류 내장과 심해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될 만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영국과 호주는 2021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선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위해 제대로 된 플라스틱의 선별 기준 강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설 및 의무화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는 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른 라벨링 제도와 선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확한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것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도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표시를 제도화하여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제260회 제4차 정례회 서동완 의원

2024년 군산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총 5천9백억 원이며 이는 군산시 전체 예산 1조 4천9백억의 약 39.63% 이라며 향후 5년을 전망하는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4.5%씩 증가하여 2028년에는 7천5백3십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편성의 목적, 배분의 원칙, 효과성이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에 전북 도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할 것 ▲전라북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연수로 구분하는 차등 지원과 개인 통장 직접 지원 등 관례대로 지급해 온 방식을 탈피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할 것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나이,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차별 없이 특별수당을 지급할 것을 전라북도에 건의했다.



”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

제260회 제5차 정례회 서동완 의원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 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할 것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을 전수조사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 ▲정부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

제261회 임시회 서은식 의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인근과,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고군산 군도 일원에서 고려청자를 비롯해 각종 문화유산이 1만 6,000여 점이 발굴되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많은 문화유산은 모두 목포의 해양연구소로 이관·전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중 문화유산은 발굴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전북권 해양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존 유사 시설들과의 차별성이 확실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 ▲문화재청은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들을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

제261회 임시회 **한경봉** 의원

2022년 1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 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 ▲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장기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할 것 ▲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모든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관리자·실무자 교육 분리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261회 임시회 **이한세** 의원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해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확산은 매우 어려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험을 완충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 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도모할 것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

제262회 임시회 **서은식** 의원

1991년부터 2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왔고 특히 2023년에는 새만금 파행과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으며 특히 2023년 정부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김제시가 지금까지도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만을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압박하고 있기에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

제262회 임시회 **서동완** 의원

지난 2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를 합의했으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제는 의료대란이라는 빌미로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소아과가 폐업하고, 분만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므로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대란 대책도 될 수 없다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할 것 ▲비대면 진료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으니 정부는 지방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선거구 득장 확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

제262회 임시회 김경구 의원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2023년 4월 10일에서 300일이나 지나 발표됐다며 이 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되어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여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비단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득장 확정으로 인하여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 성토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 지역의 선거구 축소 조정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으로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야 하나며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법을 어기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국회는 사·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 ▲국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4) 시정질문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개발문제점 지적

서 동 완 의원



1. 나운동 리츠프라자 앞 연립주택 개발의 완화 적용 근거
2. 완화 규정 적용 산정방식
3. 이러한 적용(건폐율완화)으로 인·허가한 사례가 있는지
4. 국토계획법 제63조1항1호에 의한 제한 여부 가능성
5. 향후 사업 허가 신청 시 군산시의 의견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군산시 종합청렴도 문제점 지적

한 경 봉 의원



1. 군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의 문제점
2. 2022년 2월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우리 군산시 직원 1,632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조치 사항과 주관식 문항에 답한 632명 직원들의 답변에 대한 군산시의 의견
3. 군산시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



5) 주요의정활동

군산시의회,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주거환경을 안전하게 지키자!

-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활용 대책 공개토론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3년 7월 김영일 의장, 이한세 의원을 비롯하여 시 관련부서 및 성산면 주민과 함께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활용 대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 및 주민과 집행부간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우선 임지원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공장 주변 불과 50m 거리에 군산먹거리통합 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는 군산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에도 급식 재료로 쓰이고 있으며, 50m~70m 거리에 전원주택지가 포진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군산시민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한세 의원도 “주민이 고통스럽게 나서서 투쟁해야 대책이 마련되고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른 시 재판부 판결 요지를 참조했을 때 바람의 방향, 지형 상태 등 정량적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 설립 후 문제를 막는 것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임지원 지역주민대표는 경과보고를 하면서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는 131일 째 군산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농사철임에도 집회 중이며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면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 급식마저 위협받지 않도록 시에서는 계속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서 지역주민들은 군산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서는 데 공공에서 관심을 가져 이러한

공장이 마을 한복판보다는 산단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부지활용 방안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익적 사업으로 활용하길 바라며 공장부지를 군산시 사업부지로 활용하여 성산이 친환경 재배지인 만큼 군산 먹거리 생산의 미래를 위한 공간·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농촌유학센터·게스트하우스 같은 체류형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반영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 할 것, 군산시의 친환경 급식 확대유지를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일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뜻 깊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서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최선이다”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군산시의회, 군산시공무원 노조와 간담회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3년 10월 「군산시의회-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했다.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군공노) 임원들이 참석자로 참여하여, 군산시의회와 공무원 노조간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직원 복지 및 권익향상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휴양시설 관련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에 힘 쓸 것, 하위 공무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에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차등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열린 노조 등과 함께 상생하여 직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힘써줄 것과 시 직원을 위한 12층 건강단련실의 환경을 개선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의장은 “우선 일선의 군산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군산시 발전을 위해 군산시의회-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군산시가 함께하는 것이 군산 시민을 위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한분 한분과 함께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 앞장서서 동행하겠다” 말했다.

군산시의회, 이차전지 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4년 1월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 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하여 김영란 의원·서은식 의원·윤신애 의원과 군산시, 이차전지 관계자가 참석하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TF팀 구성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동향 소개와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산의 새만금 산업단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지난 해 10조원 넘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시, 산업분야 등이

협력하여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원들은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환경 문제도 중요하다 강조했다며, 타시군의 산업단지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일 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로 애로사항과 여러 생각을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우리 모두가 군산의 주인인 만큼 우리 군산의 미래를 위해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군산

시의회는 지난 24년도 시무식에서 군산시의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팀 및 특별위원회 신설, 기업협의체 발족, 전문가 토론회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특화단지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산시의회 청사 견학

군산시의회는 2024년 3월 아산시의회 의회 의회동 4층 의장실에서 효율적인 의회 청사 건립의 방향성 제고를 위해 아산시의회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군산시의회는 김우민 부의장과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등 의원 및 직원 15명이 참석해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흥성표 의회운영위원장과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과 간담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김희영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의정 현안 및 청사 신축 관련 논의 △기념품 전달 △의회 청사 견학 및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양

지역의 현안과 의회 청사 건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아산시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 효율적인 청사 건립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 간 상호 유대관계를 증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은 “아산시의회 청사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청사 건립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행복위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문화예술과의 ‘은적사 전통 문화체험관 건립’과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2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립되는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임에 비해 국비 지원 비율이 30%로 적고, 시비 부담이 큰 점을 지적하며 국·도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에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과 익룡발자국 등 화석산지의 희소성을 부각시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것과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춰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와 현장방문이 행정복지위원들의 군산시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업추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월명수영장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공사 중지예 따라 긴급하게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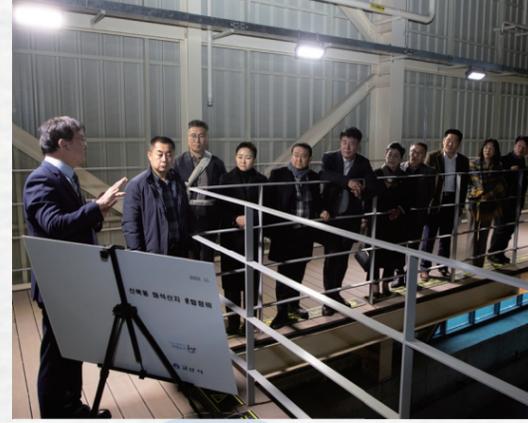
금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3년 5월 수영장 콘크리트 조각물 낙하로 인해 수영장 운영이 중지되면서, 제2회 추경에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하던 중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수영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중지하고, 월명수영장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수영장 주요 구조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은 현장을 확인 한 후,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갖고 수영장 시설 운영에 따른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행정복지위원들은 시민 건강을 위한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월명수영장 보수·보강방법과 소요예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일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이 행정복지위원들에게 위원회 소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경건위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중대)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을 현장 방문하여 군산시의 위탁사업과 보조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협의했다.

먼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를 방문하여 군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실적을 청취한 경건위원들은 수산자원 산란식식장, 해중림, 신품종 패류 양식어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군산군도 바다환경에 적합한 어족자원 육성전략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 방문하여 기관 현황과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교육 현장을 둘러본 경건위원들은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박특수용접 등 관련 교육생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서는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위주의 취업 한계와 적정 임금 등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실질적인 취업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고용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분야 특화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나중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군산시정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위원회의 전문역량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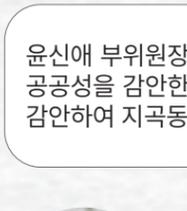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박 광 일 위원장

박광일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급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가짓수만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 중심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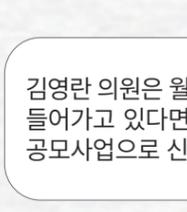
윤 신 애 부위원장

윤신애 부위원장은 도서관 부지의 타당성 검토 관련 은파 상상도서관 부지 선정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감안한 부지 선정을 요구하며 지곡동 일원은 작은 도서관조차 없어 권역과 여건을 감안하여 지곡동 내 부지에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경 식 의원

김경식 의원은 해양레포츠크터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레포츠크터는 협약으로 인하여 시민들 보다는 전문가(소방서,군산대,해양소년단) 등이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 예산 투입 대비 세외수입액이 현저히 적음을 지적하며, 우리 시 직영으로 센터운영에 대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가 적자 운영을 계속 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과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영 란 의원

김영란 의원은 월명수영장이 지어진 지 3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보수를 해도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제경기를 4~5년 이내에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장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김 우 민 의원

김우민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 여부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센터장 업무 추진비가 상당수 이사장, 임원 등에게 지출되었는데,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장 출장비 사용에 대해 센터장의 출장비가 월 2~3번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은 문화도시센터 운영과 관련, 시와 협의하지 않은 전 센터장의 경질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공모사업 선정 2~3개월 전 센터장을 경질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처분에 대하여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선유도 짚라인 위탁업체 수입·지출에 관하여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짚라인 위탁업체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료는 적게 납부한 점을 지적하며, 짚라인 위탁업체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많은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행정에서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은 군산초, 군산중, 남중, 상일고 이전 학교 관련하여 이전 후 폐교된 상태로 방치가 우려되므로, 교육지원과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전학교 활용계획이 선 수립되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군산초 활용을 위한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개 학교 활용 예산 미확보로 장기 미활용이 우려됨에 따라 장기적인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총제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실적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기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맡길 것을 요구하며, 최근 센터장 채용 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센터장에 대해 법적인 검토 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민원 신청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2달이 넘도록 배정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배정이 안되는 것은 아이돌보미가 가정과 아이를 선택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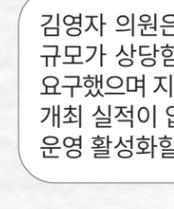
나종대 위원장

나종대 위원장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 관련하여 준공 후 약 4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균열, 누수, 공동주택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소요와 열악한 주거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사업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원룸 등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의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관련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조작할 수 있고 이용 빈도가 높은 장비 기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 수립용역 관련하여 새만금 군산시 관할 농생명용지에 대하여 복합곡물단지 외에 원예 등 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포함한 선제적인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및 TF 구성 등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은 예산 이월 및 불용 현황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가 상당함을 지적하며, 실질행 가능 규모에 맞추어 효율적인 예산 반영 및 집행 시행을 요구했으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군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해당 위원회의 목적대로 운영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관련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과다하게 내주는 경우 추후 불법사항으로 존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한 시정 조치 및 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철저 지도·감독을 요구했으며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관련해서 선유2구항 부잔교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 3건 중 2건에 대하여 사용·점용 목적인 유람선이 미운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인 허가를 내줌에 따라 해당 부잔교에 폐선이 장기 정박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박경태 부위원장

박경태 부위원장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현재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산복동 소재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되어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하여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군산시 행정의 능력대응 지적 및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세용 의원은 옥서~옥구(지방도 709호)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하여 지장 전주 및 통신주 시설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공사 지연을 지적하며, 철저한 공정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 장기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 이행을 요구했다.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윤세자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관련하여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군산시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검토와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 관련하여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므로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하여 농어촌지역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 수거량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 평가를 이행하고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를 위한 재원(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



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은 인도정비사업 관련하여 인도정비공사 등 시행 시 관할 읍면동과 인근 주민 및 상인 등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로 통행 및 영업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을 당부하며 건축공사 등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자체 인도정비공사 시 자재 및 폐기물 등이 인도를 점거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탁 관련하여 유기동물 등의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하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정·위탁과 동물병원에 대한 지정·위탁의 병행 검토 등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위탁 방식 검토를 요구했으며 농촌지역 유기견 증가 방지 대책 관련하여 농가에서 기르던 개들이 유기되거나 자연 증식 등으로 유기견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동물등록, 중성화 등의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

2023년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소개합니다.

군산시의회 소속의원 연구단체는 지난 2019년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거쳐 6개 단체가 선정되어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6개 의회 연구단체는 2023년 11월까지 학술 연구 용역을 통해 전문가 자문,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수행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똑똑스



‘똑똑스’는 공공업을 통한 지역 자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했으며 최창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광일, 김우민, 이연화 의원으로 결성됐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 국내외 공공업 사례 및 플랫폼 경제 현황 분석

▲ 군산시 공공업의 콘텐츠와 품질 고양 방안 ▲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최창호 의원은 “현재 공공업 운영실태를 분석해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업과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군산시 근대사 다크투어리즘 연구회



‘군산시 근대사 다크투어리즘 연구회’는 윤신애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은식, 김경식, 우종삼 의원으로 결성됐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일반적으로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 현장이나 재난 현장을 순례하면서 슬픔을 공유하고 추모와 성찰의 계기로 삼는

여행으로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로 의원 연구가 시작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 다크 투어리즘 성공·실패사례 조사 ▲ 다크 투어리즘과 여행자의 여행목적간의 상관성 ▲ 개항장, 일제강점기 시대의 수탈과 항일운동, 광복과 미군정 등 군산의 항일 항쟁 근대화유산의 다크 투어리즘 활용방안 등이다.

윤신애 의원은 “우리 지역문화 유산의 장소 정체성을 다시 살펴보고 다크 투어리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군산시 군 비행장 주변지역 활성화를 연구하는 모임



‘군산시 군 비행장 주변지역 활성화를 연구하는 모임’은 김경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동수, 나종대, 양세용 의원으로 결성됐다.

군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군부대 주변지역 상권 분석 ▲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용 사례 분석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사업 사례 분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분석 등이다.

김경구 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주한미군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건의활동을 이어나가고자 연구 단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군산시 미래산업육성연구회



‘군산시 미래산업육성연구회’는 한경봉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자, 설경민 의원으로 결성됐다.

주요 연구내용은 ▲주소 기반의 드론배달거점 설치 및 구축 ▲드론물류배송 상용화 서비스 ▲UAM 공역 분석 및 회랑, 버티포트 입지분석 ▲UAM, 플라잉카 기술개발 실증 모델 로드맵 제시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군산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군산시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집행기관과 계속 협의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군산시 쌀경쟁력 제고 연구회



‘군산시 쌀경쟁력 제고 연구회’는 이한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경태, 윤세자, 지해춘 의원으로 결성됐다.

연구회는 친환경 광역방제 실행 방안 연구를 통해 ▲노령화로 인한 방제 인력난 해소 ▲대단위 공동방제로 영농비 절감 방안 마련 ▲친환경 방제로 군산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대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했다.

이한세 의원은 “전국 최고의 쌀, 나아가 세계인이 찾는 군산 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광역방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화해나가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군산시 야간경제·관광 정책 연구회



‘군산시 야간경제·관광 정책 연구회’는 송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란, 김영일, 서동완 의원으로 결성됐다.

군산시 야간경제·관광 정책연구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 관광 인프라에 신야간경제·관광 프로그램을 더해 관광객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관광정책 개발을 목표로 지난 8월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신야간경제·관광은 기존 야근이나 회식, 과다 음주문화 등 부정적 이미지 관광산업을 탈피해 도시민 생활 문화 프로그램을 바꿔 고용과 문화,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새로운 미래의 경제효과와 창출 산업이다.

송미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도시들이 야간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야간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경제관광도시로써 발전을 할 수 있는 세부전략 마련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6) 국내 · 외 교류

군산시의회- 미추홀구의회, 도시재생사업 교류의 시간 가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와의 교류간담회 추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3년 8월 소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와의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교류간담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관광개발 및 도시재생 선진사례 견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미추홀구의회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환영사에서 “미추홀구의회 김영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군산은 일제 수탈의 역사와 함께 근대문화가 다양하게 배어 있는 근대도시이다.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과거의 역사를 트렌드에 맞게 개발하여 관광으로 연계한 그 중심에 ‘도시재생’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영근 미추홀구 기획행정위원장도 답사에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 월명동 등 도시재생사업지를 둘러보며 미추홀구의 도시재생 방향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연태시 부주임 일행, 군산시의회 방문 - 군산시~중국 연태시, 지산학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 논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3년 12월 중국 산둥성 연태시 판스여우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중국 연태시 대표단이 군산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20여 년 동안 국제자매도시로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온 중국 연태시는 산둥성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도로, 철로, 항로 등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한 산둥성 GDP 2위의 경제 도시다. 또한 농수산업과 경공업이 발달하였으며 16개 종합 및 전문 대학을 갖춘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다.

연태시 대표단의 군산시의회 내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여 만에 이뤄졌으며 2024년에는 양 도시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는 만큼 끈끈한 우정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단은 4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군산시 부시장과 면담 이후,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김영일 의장과 면담하고 상호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환담을 가졌다. 이후 군산시청 1층에 위치한 연태시 주군산대표처를 둘러본 후 환영 만찬에 참석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

김영일 의장은 “연태시는 7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을 정도로 거리가 가깝고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형제의 도시다”며 “앞으로 양 도시의 지산학 협력과 인적자원 교류 확대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년에 있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판스여우 부주임도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군산시의회에서 이렇게 열렬히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군산시에 방문하니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다”며 “양 도시가 가까운 만큼 실질적인 교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스여우 부주임 일행은 1박 2일의 군산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2023. 7. 18.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개장식



2023. 8. 15. 춘고 이인식선생 60주년 추모식



2023. 7. 21.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규탄대회



2023. 9. 8. 2023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2023. 8. 3. 잼버리영외활동 격려



2023. 8. 15.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2023. 9. 8. 제6회 손편지축제





2023. 9. 12.
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 추진 선포식



2023. 9. 15. 서수면민민의날 기념식



2023. 10. 4. 민주평통 자문회의 제21기 출범식



2023. 9. 20. 제61회 군산시민의날 기념식



2023. 10. 5. 군산시장기 노동자체육대회



2023. 9. 22. 군산항 군산새만금신항 미래전략포럼



2023. 10. 6. 군산시간여행축제





2023. 10. 7. 군산짬뽕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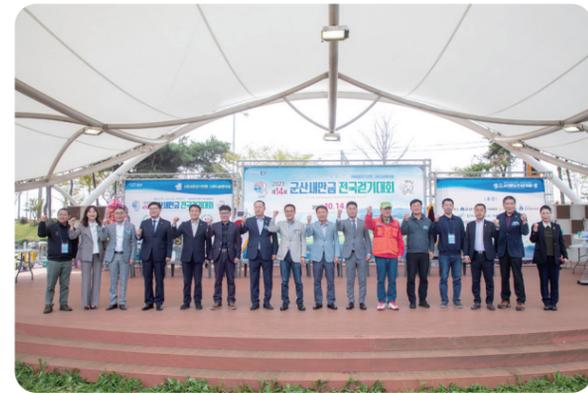
2023. 10. 13. 2023 군산시평생학습한마당



2023. 10. 11.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군산잼버리해단식



2023. 10. 14. 2023 군산새만금걷기대회



2023. 10. 12. 제32회 오성문화제전



2023. 10. 26. KCN 이슈와 화제 녹화





2023. 10. 29. 군산시장배 단축마라톤대회



2023. 11. 4. 제12회 청암산구슬뿌 전국등산축제



2023. 11. 9.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



2023. 11. 9. 소룡동 실버커뮤니티센터 개관식



2023. 11. 18. 옥산면 당북리 어울림센터 준공식



2023. 11. 24. 청소년범죄 대책토론



2023. 12. 5.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정책토론회





2023. 12. 6. 미국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스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식



2024. 1. 2. 시무식



2023. 12. 20. 2023 군산새만금신항 전략포럼



2023. 12. 20. 군산시의회 송년회



2023. 12. 21. 2023 군산새만금신항 바로알기포럼



2024. 1. 2. 2024 신년 군경묘지 참배





2024년 읍면동 신년대화



2024. 1. 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2024. 1. 31.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성금전달



2024. 2. 5.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2024. 2. 20. 경암동 서래장터 상가번영회 창립식



2024. 3. 6. 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



2024. 2. 26. 군산상공회의소 제22~24대 김동수 회장 퇴임식



2024. 3. 15. 군산걷기연맹 회장 이취임식



2024. 3. 1.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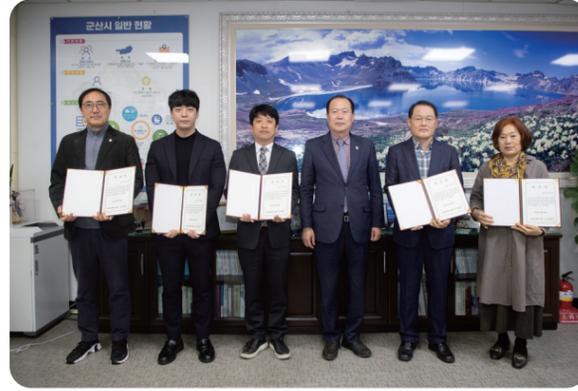


2024. 3. 21. 서수면 외무장마을 경로당 준공식





2024. 3. 22.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간담회



2024. 3. 28.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4. 3. 25. 시니어클럽 치안지킴이 발대식



2024. 3. 25. 제17기 군산농업인대학 입학식



2024. 3. 29. 2024년 귀농귀촌교육개강식



2024. 3. 29.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2024. 3. 27. 2024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출정식



2024.4.15. 상생협약우수아파트 현판식



2024.4.29.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2024. 5. 2. 제19회 군산콩당보리축제



2024.5.14. 군산시의회-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군산새만금신항과 2호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 불가 건의(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문 전달)



2024.5.3.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대한노인회군산시지회,군산시의회 전북자치도 화합을 위한 김제의 일방적 관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대회



2024.5.14.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



2024.5.13. 새만금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촉구 건의(새만금 개발청 방문)



2024. 5. 22. 군산시의회-익산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3) 의원칼럼



서동완 군산시의회 의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 강화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 지키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출생아 감소로 진료량이 줄어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를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되며 2032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61조 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의료 이용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보험재정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수입구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심각하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하여 환수 결정한 불법 개설 기관은 1700여 곳으로 총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24년 군산시 예산 1조 6000억 원 보다도 약 2배가량 많은 액수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사무장병원에 의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4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 1월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또다시 계속심사 대상 안건으로 결정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무장병원의 운영 수법은 날로 지능화·진화해 가고 있는데 이를 수사할 경찰 등 수사 인력은 부족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갈수록 가중되는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사무장병원엔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2018년 1월 밀양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46명이 사망한 사건도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의료시장에서 하루빨리 퇴출해야 할 것이다.

공단이 2019년 9월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과잉 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불법적 환자 유치와 보험사기 등으로부터 의료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경험이 있는 의료·수사·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다년간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11개월 5일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들도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와 같은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을 기원해 본다.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해양경찰서 선유도출장소 이전부지 재검토하라

2022년 군산시와 군산해양경찰서는 현재 선유 1구(선유도리 393-7)에 위치한 선유도출장소를 선유 2구(선유도리 476 외)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토지이전 등 교환절차를 마무리하여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선유도출장소 이전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도로개설과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유1구가 지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부지 규모는 선유도리 476번지, 333-3번지 두 필지이며, 면적은 약340㎡ 이다. 부지의 소유주는 군산시이다.

하지만 이번 출장소 이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신축예정 부지의 적정 여부이다. 예정부지 양옆으로 선유도 파출소와 선유도 보건지소가 각각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선유도 우체국이 자리잡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행정기관 밀집으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주민과 관광객은 예정부지를 유희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예정부지에 출장소가 신축되면, 사실상 주민과 관광객의 신축 출장소 주차장 이용은 불가능 해져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이 우려된다. 또한 뒤편에 위치한 우체국에 우편물 배송 차량이라도 정차 한다면, 그 일대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다음은 해경이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이다.

해경은 선박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를 위해 빨리 현장에 접근하는 게 그 첫 번째 임무이다. 하지만 선박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선유 2구에 출장소가 자리잡는다면, 긴급출동 등 해양안전에 필요한 업무수행이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선박사고 대응만을 생각한다면, 선박 진출입이 빈번한 선유 3구가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와 소통 부재를 들 수 있다. 출장소 이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지만, 군산시와 해경은 주민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기준가액 미달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의회와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종합해보면 군산시와 해경이 추진하고 있는 해경 선유도출장소 이전은 부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재추진해야 마땅하다.

예정부지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신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논리보다, 과연 어느 곳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합한지 다시 재검토하라.

새만금관할권 대응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하다 특집

1. 새만금관할권 대응 및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활동 (2024년 1월 ~ 2024년 5월)

- (1) 총괄대응일지
- (2) 주요활동
 - 1) 새만금 관할권 관련 기자회견문
 - 2)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적극 건의
 - 3)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칼럼
 - 4) 보도자료



새만금이 통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미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총괄대응일지

일 자	대 응 사 항
2022.10.13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새만금 신항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주문
2023.01.02	김영일 의장 언론 기고 '새만금신항, 자명한 군산 새만금 신항이다'(전북도민일보)
2023.01.11	군산시의회 긴급 의원총회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 대응 방안 논의]
2023.01.11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 브리핑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
2023.01.11	군산시의회 새만금 신항 현장방문
2023.01.12	최창호 의원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23.01.12	전라북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설명회 보이콧(관할권에 대한 도방관 비난) '신항만의 군산 관할권을 명백히 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라'
2023.01.17	김우민 의원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23.01.30	군산시의회의원 및 강태창·김동구·문승우·박정희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언론 브리핑 [군산새만금신항·동서도로의 관할권은 '군산시'임을 천명한다]
2023.01.30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을 위한 도지사 면담 요청[1차 시도] (⇒ 성의없는 전라북도 대응으로 무산)
2023.02.09	새만금신항 관할권 해결 촉구 관련 도지사 면담요청 공문발송[2차 시도]
2023.02.09	윤신애 의원,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2023.02.20	새만금신항 관할권 해결 촉구 관련 도지사 면담요청 공문발송[3차 시도]

일 자	대 응 사 항
2023.02.24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와의 면담 및 건의문 전달
2023.03.06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언론 기고 [군산새만금신항의 성장동력과 정체성에 초점을] (전라일보)
2023.03.09	군산시의회 의원총회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대응 방안 논의]
2023.03.21	군산시의회 집행부와 간담회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 대응]
2023.03.22	군산시의회 의장단 회의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논리 개발 외]
2023.03.15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윤신애 의원)
2023.03.27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서동수, 서동완, 윤신애 의원)
2023.04.10	군산시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과의 간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통합방안 제시 촉구]
2023.04.11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새만금 발전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주장과 제로섬 게임을 즉시 중단하라] (전북도민일보)
2023.04.18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관련 집행부와의 간담회
2023.04.25	군산시의회 의원총회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논의]
2023.04.25	서은식 의원, '전라북도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 제시 촉구' 성명서 채택
2023. 4월중	군산시의회 의장, 민방위교육 등 새만금관할권 시민 홍보
2023.05.13	군산시의회,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참여
2023.05.31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군산과 김제 간 분쟁과 분열의 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투데이군산 외 다수)
2023.06.14	우종삼 의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2023.06.14	윤신애 의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일 자	대 응 사 항
2023.06.14	군산시의회,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의원 간담회
2023.06.27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 브리핑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 규탄 기자회견
2023.07.23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김제시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상생협치의 자세를 가져라!] (군산미래신문 외 다수)
2023.07.27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 전북도의회 브리핑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 규탄 성명] 기자회견
2023.07.31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 (전북도청 정문, 400여 명 참석)
2023.08.01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언론 기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을 관할권 분쟁 허브로 만들지 않으려면] (군산미래신문 외 다수)
2023.08.02	김영란 군산시의원 언론 기고 [김제시의 흑색선전과 무모한 역사왜곡은 사실일까?](국제뉴스 외 다수)
2023.08.04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간담회 참석
2023.08.08	군산시의회, 김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 행위 규탄 건의문 전북도청 전달 -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2023.08.10	김우민 군산시의원 언론 기고 [왜 '군산'새만금신항인가?](전민일보 외 다수)
2023.08.14	지해춘 군산시의원 언론 기고 [새만금 관할권, 무엇보다 주민이 우선이다](전북중앙 외 다수)
2023.08.17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군산새만금신항 인근, 700여 명)
2023.08.18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세종정부청사 앞, 1,100여 명)
2023.08.29	윤신애 의원,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2023.08.31	최창호 군산시의원 언론 기고 [전라북도, 이제부터라도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전민일보 외 다수)
2023.09.04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 브리핑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9.05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분쟁 및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대응방향 제시 - 집행부와 간담
2023.09.06	새만금 관할권 해결 촉구 관련 전라북도지사 면담 요청

일 자	대 응 사 항
2023.09.07	윤신애 의원,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2023.09.07	양세용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
2023.09.08	김영일 군산시의장, 강의 [새만금의 미래와 우리의 준비] (전북인력개발원, 50여 명의 청소년 대상)
2023.09.15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투데이군산 외 다수)
2023.09.18	새만금 관할권 해결 촉구 관련 전라북도지사 면담 재요청
2023.09.19	군산시의회,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 식발투쟁 - 김영일 의장, 김우민 부의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김경식 윤리특별위원장, 김영란, 박경태, 서은식, 이연화, 양세용, 한경봉 의원
2023.09.20	군산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회복과 새만금 관할권 방안 논의
2023.09.22	군산시의회,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미래전략 포럼 참석
2023.09.26	군산시의회, 새만금관할권 중재 전라북도지사 결단 촉구 기자회견
2023.10.05	군산시의회, 새만금 긴급 의원간담회
2023.10.06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간담회
2023.10.12.~13	군산시의회, 범시민가두 서명운동 전개(전라북도 중재 촉구)
2023.10.16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북 결단 촉구 집회
2023.10.24	윤신애 의원,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 채택
2023.10.26	김영일 군산시의장, KCN 이슈와 화제 출연 - 새만금 관할권 전라북도지사 중재 촉구
2023.10.31	이래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장 언론기고 [새만금관할권 분쟁, '역전의 명수'저력을 보여줍니다!](전민일보 외 다수)
2023.11.02	군산시의회 언론브리핑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관할권 주장을 중단 촉구]

일 자	대 응 사 항
2023.11.03	황대욱 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언론기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한다](투데이군산 외 다수)
2023.11.07	군산시의회,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 참석 (국회의사당)
2023.11.09	김성희 군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언론기고 [전라북도지사, 지역소멸 위기에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라]
2023.11.10	심명수 군산시수협어촌계협의회회장 언론기고 [떨레야 떨 수 없는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국제뉴스 외 다수)
2023.11.13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간담
2023.11.16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언론브리핑 및 전북도청 서명부 전달 [정부와 전라북도는 중분위의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3개 시군 상생방안 제시 촉구하라]
2023.11.17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를 위한 집회 (세종정부청사 앞, 600여 명)
2023.12.05	서은식 의원,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 채택
2023.12.06	군산시의회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담회 실시
2023.12.11	군산시의회 언론브리핑 [더 위대한 군산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송년 기자회견
2023.12.20	군산시의회 송년사 발표 [김제의 관할권 공격에 더 강하게 맞서나갑시다]
2024.01.02	군산시의회 시무식 -군산새만금을 2차전지의 신홍메카로 도약시키자
2024.01.17	군산시의회, 이차전지 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2024.02.05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군산시의회 적반하장 처사라는 사실을 읽고 이건설 전 김제시장님께 전하는 글] (전북도민일보)
2024.02.07	군산시의회·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언론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새만금 메가시티 기본계획반영 촉구]
2024.02.15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를 위한 집회 (세종정부청사 앞, 300여 명)

일 자	대 응 사 항
2024.02.28	군산시의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
2024.03.08	서은식 의원,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
2024.03.15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새만금 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용도를 변경하여 새만금의 빅픽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 (전북일보)
2024.03.18	군산시의회,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주거기능' 추가 당위성 적극 건의
2024.03.27	군산시의회 의장, 이건설 전 김제시장과 새만금 통합을 위한 토론회 - 김제시민의신문사 개최
2024.04.11. ~30.	군산시의회 의장, 새만금 관할권 대시민 홍보 - 군산시니어클럽 교육장, 사업장 등 총 8회
2024.04.12.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기고 [군산시민 일심동체 되어 군산새만금 신항만 사수합시다](군산미래신문 외)
2024.04.16.	설경민 의원,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 채택
2024.04.19.	서동완 의원,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 채택
2024.05.03.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군산시의회 전북자치도 화합을 위한 김제의 일방적 관할권 주장 중단촉구 결의대회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대회의실, 약 100여 명)
2024.05.08.	군산시의회 의장, 새만금 관할권 대응 대책회의 개최 - 새만금에너지과 관계자
2024.05.13.	군산시의회, 새만금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촉구 건의 - 새만금개발청에 건의문 전달
2024.05.14.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군산새만금신항과 2호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 불가 건의-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문 전달
2024.05.14.	군산시의회,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 참석 - 세종정부컨벤션센터 중회의실
2024.05.22.	군산시의회-익산시의회, 새만금 통합 메가시티 관련 의장단 간담회

(2) 주요활동

1) 새만금 관할권 관련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칼럼을 통해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희망이자 오랜 숙원으로 탄생하여 도민들의 염원 속에서 꽃봉오리를 틔우고 성장해 왔다”며 “새만금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을 줄이고 새만금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선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북 1호 공약으로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통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메가시티’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작년 잼버리 여파에 따라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에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실정이다.

새만금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왔던 전북도민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

새만금 3개 시군의 화합이 절실한 상황에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군산시의회도 그동안 수차례 새만금 3개 시군의 확실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 대정부질의에서 밝혔듯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는 3개 시군이 분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하지만 김제는 지난 연말에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에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개입을 중단할 것과 새만금 동서도로와 방파제 등에 대해 김제 관할로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김제의 행태는 지역소멸의 위기 속 전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분쟁의 땅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관할권 분쟁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먼저 '선 개발 후 행정구역' 결정 원칙을 명확히 한 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분위의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발주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협력하여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3개 시군을 갈등을 종식해 전북의 화합을 이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 경제 허브가 될 것이다.

이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대통령의 전북 공약 1호인 '새만금 메가시티'가 추진되어 새만금 3개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멈추기 위해 선 개발 후 행정 구역 결정 원칙을 지키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분위 심의를 당장 멈춰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여 새만금 3개 시군 갈등을 해결하라!

하나. 김제시는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새만금 메가시티' 등 3개 시군 상생방안에 적극 협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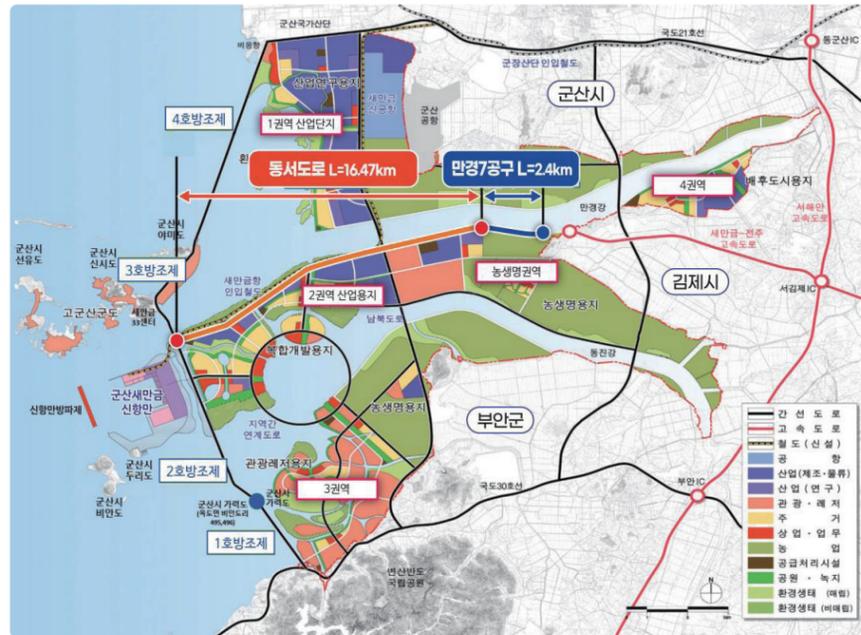
2024년 2월 7일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2)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적극 건의

정부는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60만평을 관광레저주거용지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라!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기업 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수변도시 통합계획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투자진흥지구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 입주가 활발해짐에 따라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성면적이 충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60만평)에 주거용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글로벌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호텔·위더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객 수가 적어 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용지로만 지정된다면 주말에만 찾아오는 관광객 가지고는 수익분기점을 채울 수 없다. 일례로 비응항만 보더라도 이용객이 적어 바가지요금의 극성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하면 비응항,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새만금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차전지 산업단지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근접한 지역, 즉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배후도시를 지정·주거용지를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공간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해 배후도시를 조성·인프라를 확충해야 만이 새만금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발전을 이루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신시야미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해 쾌적한 배후도시 조성으로 새만금이 기업과 사람이 바글거리는 활기찬 희망의 땅이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신시야미 관광레저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배후도시가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3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부는 전북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발판삼아 새만금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새만금 통합시대를 열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세워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모양새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마저도 지지부진해 정부의 추진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허울뿐인 특별자치도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지난해 재정자립도 평균치가 10.9%로 전국 평균인 4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한때 인구 252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은 이제 175만 명 선까지 추락하며 붕괴하고 있다. 이제 전북은 인구소멸을 넘어서, 경제소멸의 극한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국내 경제전문가, 정치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새만금 개발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3개 시군을 통합하여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통합 새만금에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만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새만금에 공공기관 이전 검토와 새만금 3개 시군을 통합해 윤석열 대통령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이행해서 새만금 통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새만금 통합 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드시 담아 대통령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 신속 추진과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 새만금이 통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미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를 ‘새만금’으로 선택하라!

하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차질없이 추진해 새만금 통합시대를 열어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와 새만금 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반영하라!

2024년 5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군산새만금신항과 2호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 불가 건의문

군산새만금신항은 2010년 7월 16일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연안매립식과 인공섬식 2가지 배치형식을 검토한 끝에 최종 인공섬식 배치형태로 확정된 바 있다.

인공섬식 개발 결정은 항만부지와 2호방조제의 단차를 해소하여 도로 등의 동선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친수공간 배치가 용이하며 해수교환율이 연안매립식에 비해 2배 넘게 높으며, 해수교환율의 증가는 수질오염과 경관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제시는 새만금 내측 개발지역의 관할권 주장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새만금신항과 2호방조제 사이의 바다를 매립하면 부지를 확보 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를 송두리째 뒤엎으며 무시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시 제시한 기준의 일부인 연결성을 어떻게 해석든지 강제로 맞추려는 획책일 뿐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이 개발되는 바다는 과거부터 군산시가 관할을 해왔고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군산시가 관리하는 해상경계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엄연한 군산시 관할이며, 인공섬형태로 주민이 거주하는 두리도와 연결해서 개발 되고 있다. 또한 주변에 군산시가 관할 하는 도서들이 즐비하다.

그런데도 억지로 방조제와 신항을 붙여 육지화하면 김제시 땅이 될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추진하려는 김제시의 욕심을 군산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새만금산단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하고 향후 새만금신항 운영과 연계하여 군산항 부두기능 재조정 및 기능전환을 하고자 했던 새만금신항의 근본적인 개발의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결과를 토대로한 인공섬식 개발을 새만금신항이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고 나아가야 하며, 김제시의 어떠한 주장에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기존 새만금방조제와 단차 해소, 친수공간 확보, 해수소통에 따른 수질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공섬식 개발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새만금 기본계획(MP)이 어떤식으로 변경되더라도 방조제와 새만금신항 사이의 해수공간에 대한 매립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인공섬식 개발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2024년 5월 14일

군산시의회·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3)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칼럼

군산시의회 적반하장 처사라는 사실을 읽고 이건식 전(前) 김제시장님께 전하는 글

존경하는 이건식 전(前) 시장님,
갑진년 새해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이건식 전 시장님께서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하신 「군산시의회 적반하장」 처사의 글을 잘 보았습니다. 특히 “김제시를 도적 떼라 망언한 것에 모욕죄로 사법처리를 요구한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만을 ‘군산 새만금 신항만’이라 개칭 의결했다니 막가파 집단이다”라고 주장하셨지요.

물론 전북의 미래와 희망인 새만금을 놓고 관할권 다툼의 당사자인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 향후 관계 다 떠나서 불미스런 관계는 형성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없다면 더 이상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김제시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너그럽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제가 김제시민들에게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으로서 김제시가 끊임없이 새만금에 대한 관할권(소유권)만을 주장한다면 어찌 도적 떼라는 정도뿐이겠습니까?

새만금 관할권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건식 전 시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시장님 말씀대로 모든 김제시민이 나서서 저를 모욕죄로 사법처리를 하신다면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엄연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산 새만금의 관할권(소유권)을 지키려는 역사적인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저보고 죄인이라 하겠습니까? 저는 진정한 역사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그 날까지 23명의 시의원,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똘똘 뭉쳐 사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이건식 전 시장님,
새만금은 분명 군산, 김제를 떠나 차별받고 천대받는 전라북도의 미래의 땅이요, 희망의 땅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김제를 만들어왔습니다만 이제는 차별받고 천대받는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새로운 획을 그으실 때입니다. 내 지역 김제에 안주하지 마시고 전북의 위대한 역사를 활짝 열어가는 선구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하게 청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원하게 결단하여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익산까지 아울러 통합해야 원대하고 위대한 새만금 시대로 활짝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지 않아 지방도시들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노령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을 놓고 죽기 살기로 싸판만 벌려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각 지방마다 살아남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충청권도 힘을 합쳐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를 초광역단위로 묶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걸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일찍이 정감록에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싸움질이나 한다면 어찌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어찌 전라북도의 미래와 희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건식 전 시장님!
역사에 역행하는 소인배보다는 전라북도의 찬란한 역사를 선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주시길 권면합니다.

2024 갑진년 청룡의 기상을 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고일 : 2024. 2. 5.)



새만금 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용도를 변경하여 새만금의 빅픽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수변도시 통합계획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 입주가 활발해짐에 따라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배후도시 역할을 해야 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신항만 뒤편에 위치, 각종 먼지와 항만에서 나오는 환경유해 물질들이 배출되어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조성여건이 적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60만평)에 주거용지를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글로벌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호텔·워터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객 수가 적어 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관광용지로만 지정된다면 주말에만 찾아오는 관광객 가지고는 사업의 수익분기점을 채울 수 없다. 일례로 비용항만 보더라도 이용객이 적어 바가지요금의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하면 비응항,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새만금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차전지 산업단지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근접한 지역, 즉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배후도시를 지정·주거용지를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새만금 수변도시 생활인프라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 입주할 새만금 수변도시의 추정 인구는 총 4만700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진해신항 배후지역 선박과 대형 트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해풍으로 인한 확산으로 일부 물질오염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 심지어 신항로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는 도로교통 환경기준 및 주거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화물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또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군산시의회
의장 김 영 일

이렇게 새만금 신항만 배후지역의 주거환경은 대기오염, 소음,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데 4만 명은 고사하고 어느 누가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거주하려고 할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공간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의 상위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수변도시 주거용지의 용도 변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라도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해 배후도시를 조성·인프라를 확충해야 만이 새만금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발전을 이루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기고일 : 2024. 3. 15.)



군산시민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군산새만금신항만을 사수합시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을 대법원에서 판시한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여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법 조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번 결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애초 행안부 결정대로 부안·김제 관할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현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군산시민이 알다시피 김제는 2호 방조제에 이어 끊임없이 새만금 신항만마저 김제 관할이라며 소유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5월 17일이면 중분위 7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만경 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의 결의문과 기자회견 등 행정 관할 결정 보류 및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함께 세종시 정부 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산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결정이 수차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가 강력하게 법대로 관할권을 빠르게 결정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은 긴박하기만 합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산의 소유 땅에 위치한 군산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와 한강 이남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 신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인 군산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항구관리 능력과 항구산업이 집적되어 새만금 신항만을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갈 저력과 자격이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장 김 영 일

그러나 새만금신항의 소유권을 김제에게 뺏긴다면 항구도시 군산의 운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의 역사적 명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군산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에 있는 새만금신항이 김제 관할이 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민 여러분께서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핵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정치권, 사회지도층, 시민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1·2호 방조제 결과로 우리 군산시민끼리 서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을 교훈 삼아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얼마나 우리는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결의를 다져왔습니까. 새만금신항만은 2026년 5만톤급 2선석,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나날이 발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군산항의 운명은 저물어 가지 않겠습니까?

부디 시민 여러분께서는 군산의 주인으로써 군산의 운명이 좌우되는 새만금 행정 관할 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시들어지고 나 몰라라 한다면 새만금 관할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동안의 여정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기회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다음 달 중분위가 결정하기 전까지 군산의 미래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생각합니다. 군산시민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군산새만금신항만 사수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고일 : 2024. 4. 12.)

4) 보도자료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군산새만금을 2차전지의 신홍 메카로 도약시킬 것

2024년 중점 의정현안을 2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구축으로 꼽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시무식에서 2024년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기반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는 지난 7월 군산의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 첨단전략사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군산시의 후속대처가 뒤처진다는 여론에 따라 군산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군산 새만금과 함께 이차전지 4개 특화도시로 지정된 울산시, 포항시 등은 즉각 대응하여 TF팀 및 특별위원회 등 신설, 기업협의체 발족, 전문가 토론회 등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특화단지 후속대책 추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도 미래 산업시장을 견인할 이차전지 단지를 뒷받침할 도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역점을 두어야 하며, 군산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으로 2028년 전북 지역에서만 생산액 65조 2,315억 원과 부가가치 19조 7,942억 원이 발생된다고 전북경제연구원은 예측하고 있으며, 최근 LS그룹도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1.8조원의 투자를 결정하는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따른 기업유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유치를 위해 지난 6월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건의안을 상정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송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군산시가 ‘세계적인 이차전지 신홍메카’로서 급부상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 처리 시설 건의안」으로 이차전지 재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 및 과정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필히 마련해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행보를 늦추지 않고 2024년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이미 7월에 발표한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7대 후속대책과 전라북도의 전략에 발맞춰 세부적인 밑그림을 구상하는데 의정운영의 역점을 두겠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단 배후도시로서의 수용 태세를 갖추기 위한 긴박한 상황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때임을 역설하며 ▲새만금 이차전지 협약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인력

양성 해소방안 및 지원제도 ▲이차전지 폐수 및 대기 환경문제 해결방안 및 대안책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전·후방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폐배터리 분석 센터)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배터리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 ▲이차전지 시험 인정센터 ▲이차전지 소프트웨어(BMS) 센터 조성 등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야말로 군산의 도시 및 산업 생태계가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이므로, 배후도시로서의 태세 확보에 뒤처지면 안된다”며 “군산시의 지·산·학·연을 총결집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후방 산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하여 이차전지 산업에 수반되는 폐수처리 등 예측되는 환경 문제에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동반체제 구축에도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와 간담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1월 8일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이래범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년인사와 함께 현재 중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새만금 관할권 대응 방향과 향후 시민의지 결집 및 표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래범 공동위원장은 “작년 한 해 새만금 관할권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일 의장은 “올 상반기 6개월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김제에서 작년 말 새만금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 촉구 및 관할권 강경대응 예고를 하고 나섰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등을 앞둔 현재에 앞으로 우리는 관할권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가 8조 이상 유치되는 상황 속에 새만금 신항이 군산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며 “군산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가자”라고 말했다.

군산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킨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300여 명의 시민, 새만금관할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 가져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 등)는 2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300여 명의 시민과 김영일 의장 등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대한 군산시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집회에서는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발언과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먼저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을 지키고 우리 군산의 발전을 염원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김제

에서는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이라며 그 앞에 새만금 신항도 넘보고 있는데 과연 군산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새만금 신항만 앞에서 한 번, 도청 앞에서 세 번했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이 먼저 된 후 관할구역이 차후에 협의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군산시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도 “새만금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개발해온 땅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김제에서 자기 관할이라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군산시민 여러분이 아다시피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내주는 뼈아픈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김제는 군산의 운명이 달린 새만금 신항까지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군산 시민 모두가 죽고자 하는 각오로 싸워야만 새만금을 지켜 후손들에게 당당한 군산, 미래가 있는 군산, 희망이 있는 군산을 남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북 1호 공약으로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통합해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했으나 지금 이순간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새만금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 본궤도 진입을 위해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에 대해 방관하지만 말고 먼저 ‘선 개발 후 행정 구역’ 결정 원칙을 명확히 할 것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개발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김제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집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행정구역이고 그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새만금 전체지역의 관할구도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만 보더라도 김제시 관할이 당연하다며 김제 관할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을 위한 전체의원간담회 개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를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이 동서로 확연히 분리되는 점을 앞으로의 관할권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동완 의원은 “해수유통 관련해서 시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담수 개념이지만 해수유통이 되어 물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뿐 아니라 김제, 부안 등 자체 용역을 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계획에 과연 반영될지 의문이다”라며 “일단 관할권 문제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이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월 27일 소회의실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원간담회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들어감에 따라 시 집행부의 현황을 청취하며 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우리 시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새만금 빅픽처가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군산시의회,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주거기능 추가 당위성 적극 건의!

새만금청에 기본계획 변경 건의문을 전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만금 빅픽처를 그려달라 요청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18일 새만금 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방문하여 ‘신시야미관광 레저용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촉구’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을 통해 현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주거기능의 용지가 없어 정주민구가 없고, 사업수익성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하면 비응향,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근접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강화된다며,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신시야미 관광레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이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배후도시가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요구하는 점은 새만금 야미도 앞 약 60만 평 관광레저용지의 용도변경이다”며 “해당 용지는 지금 30년이 다 되도록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용도변경을 해야하는 사유로는 첫째,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의 정주 인구가 적어 평일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관광지 물가가 비싸지는 악순환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셋째로 관광레저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정주여건이 만들어지면 호텔이나 기타 관광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관광레저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해 배후도시를 조성한다면 훨씬 더 새만금 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전북1호 공약사항인 새만금 메가시티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새만금청의 역할이 중요하니 지방소멸의 한계를 딛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축, 국가사무위임 등 대승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작년에 새만금에 10조원이 넘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투자유치가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기업활동 지원과 함께 관광·레저 등 다른 분야에서도 민간투자를 끌어내겠다”면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에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등 3대 허브 구상이 구체화될 것

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의회에서 건의 해주신 사항을 포함하여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철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 이행 등 새만금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의회의장, 새만금 통합 논의에 대한 첫 물꼬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새만금 통합 관련 토론회 참석



먼저 이건식 전 시장은 역사적 자료와 만경강과 동진강 등 자연 지형물 경계를 통해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것이라며 2호 방조제는 물론이고, 동서도로와 신항만, 수변도시까지도 김제의 소유가 맞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영일 의장은 2호 방조제의 김제 관할권 결정으로 군산시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서도로는 물론 새만금 주변 인프라까지 관할권 주장을 하는 김제의 현재 모습은 새만금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또한 새만금의 모든 관할권 문제를 지금처럼 김제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부의 결정에만 의존한다면 지역 간 발목잡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시간만큼 새만금의 발전도 없을 거라고 강조하며, 통합의 대원칙 속에서 3개 시군의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이건식 전 시장은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2호 방조제 인근에 있고, 군산이 주장하는 군산항의 대체항 개념으로 신항이 추진되는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3개 시군의 경계를 바탕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후,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은 3월 27일 김제 시민의신문사에서 개최한 <새만금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새만금 통합과 상생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일 의장과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참석하여,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군산과 김제의 입장의 논리를 펼치며,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김영일 의장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도 없고, 내용도 없는 특별단체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3개 시군이 납득할만한 관할권 문제해결과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의 유일한 대안은 새만금이며, 새만금 통합만이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 대립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고, 개발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며 재차 통합을 강조했다.

반면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통합보다는 현재 산적인 문제를 해결 후 통합으로 가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 관할권 결정을 고수했다.

이 전 시장은 새만금특별시로 통합된다면, 군산·김제·부안구로 나뉘질 텐데 그에 따른

경계가 구분되어야 한다며, 창원·마산·진해의 경우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었기에 수월하게 통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일 의장은 3개 시군의 통합에 따른 지역 구분의 문제는 선통합을 전제로 논의하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오늘 자리가 소통의 실마리를 푸는 징검다리였다며 앞으로도 김제와 군산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하자며 앞으로도 대화를 나눌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도 새만금 통합에 대해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새만금 관할권 및 상생통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새만금관할권 홍보 위해 뛰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새만금관할권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 활동은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군산시니어클럽 교육장, 사업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영일 의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새만금관할권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관련 문제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로 시민들이 관할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해결과 새만금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신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2026년 5만톤급 2선석,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나날이 발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군산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야말로 군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날 우리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1·2호 방조제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번에는 군산시민 모두 뚝뚝 뭉쳐서 너나 할 것 없이 군산의 운명이 달린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는데 꼭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들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관할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자치도의 화합을 위해 김제의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군산시의회·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결의대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회장 이래범)는 5월 3일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전북자치도 화합을 위해 김제의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약 1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였고, 이래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자유발언과 결의문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래범 위원장은 자유발언에서 우리 군산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선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원칙’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도 김제가 2호 방조제를 차지하고도 새만금 신항만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 수심 문제해결과 새만금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산의 운명이 달린 사업임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군산시민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세종시로 전주로 새만금으로 이래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뚝뚝 뭉쳐 우리가 쌓은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새만금의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 호소했다.

다음으로 결의문을 통해 김제시의회가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할권 해결부터’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펼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차지했음에도 신항만·동서도로까지 내놓으라며 새만금을 통째로 먹으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김제시의 후안무치함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제시의회,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가 보이고 있는 소지역이기주의는 명백히 새만금 3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화합·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나친 욕심으로 김제시만의 이익을 추구해 갈택이어(竭澤而漁) 자세만 고집한다면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김제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새만금 관할권 요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는 언제까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지켜볼 것이냐며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바라보지 말고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3개 시군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담론을 논의할 것과 전북자치도 지사는 전북이 지금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북의 유일한 대안인 ‘새만금 메가시티’에 3개 시군이 화합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실상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라면서 정부가 1·2호 방조제 결정 당시 때로따로 결론을 냈으므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때마다 관할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뒤 일괄 결정할 수 있도록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원칙'과 새만금개발청장도 올 연말까지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이행되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추진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 위원회,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는 김제가 더 이상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모두가 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정부는 지난 1·2호 방조제부터 건건이 결론을 내어 관할권 분쟁을 야기해 이에 책임을 지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개발 완료 후 관할을 결정할 것'과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할 것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3개 시군은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3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대응 대책회의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월 8일 의장실에서 새만금에너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새만금 관할권 중분위 회의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행정구역 결정 관련 중분위 동향 공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이 오고 갔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중분위 결정에 따라 군산시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은 반드시 군산시가 사수해야 하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회와 집행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새만금 통합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지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새만금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적극 건의!

새만금청에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발판삼아
새만금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새만금 통합시대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월 13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방문하여 ‘새만금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촉구’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건의문을 통해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3개 시군을 통합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해 통합 새만금에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만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를 ‘새만금’으로 선택할 것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차질없이 추진해 새만금 통합시대를 열어줄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와 새만금 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간담에서 “전북의 경제가 현재 수렁의 늪에 빠져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북이 인구소멸·경제소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새만금 통합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에 익산까지 통합해 그 전제로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지사가 중분위에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지사의 리더십 부재로 도민에게 위기 돌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장이 도지사과 새만금 시군 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우민 부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만 보더라도 2012년 10만 명 정도였던 인구가 현재 약 39만 명으로 현저히 증가했고 재정자립도만 해도 2013년 38.8%였는데 2023년에 57.2%로 증가하였다”며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새만금청장 임기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전북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확실히 반영 되었으면 한다”며 “새만금청이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음을 군산시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기에 앞서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나아가 익산까지 포함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새만금 개발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신애 의원은 “작년부터 군산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까지 일어선 이유는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며 “새만금 메가시티 등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얼마전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를 선정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전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한다면 새만금 개발이 빨리 완료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군산·김제·부안 등이 하나가 돼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 사업 지역뿐 아니라 익산까지 이어지는 발전 축을 가지고 현재 새만금 메가시티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만금 메가시티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들을 위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 등 3대 허브 조성,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등 새만금 백년대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3월에도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주거’ 기능을 추가해 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새만금 개발청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 불가하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군산시의회·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건의문 전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는 지난 14일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해수청장)을 방문하여 ‘군산새만금신항과 2호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 불가’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김제시의 터무니 없는 해수공간 매립주장을 일축하고, 새만금신항을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건의문은 새만금신항의 근본적인 개발 의도를 잊지 말 것을 해수청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존 새만금방조제와 단차 해소, 친수공간 확보, 해수소통에 따른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섬식 개발을 변경하지 말 것, ▲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관계 없이 방조제와 새만금신항 사이의 해수 공간 매립은 절대 안되고, 인공섬식 개발기조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범 위원장은 간담에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정부가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원칙을 반영하라 요구하고 있다”며 “김제시 주장대로 새만금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이 매립된다면, 해수유통이 되지 않아

생태계가 파괴된다. 해수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은 “전북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새만금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김제시는 2호 방조제를 차지하고도 새만금 신항만까지 빼앗아 가려고 전북 자치도를 분열시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 시민들은 이에 맞서 지켜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메가시티 및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을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 건의했다”며 “김경안 새만금청장도 새만금 3개 시군과 익산까지 포함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해 새만금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민과 시의회는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이 인공섬식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새만금 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 해수공간은 절대 매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중분위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김제시의 주장대로 매립을 해서는 안된다”며 “매립을 하게 되면 해수유통도 안될 뿐 아니라 신항만을 조성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민들이 지난 30여 년간 희생하면서 누구보다 새만금의 발전을 바라왔다”며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이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창석 해수청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을 서해안 물류 중심항만으로 조성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만금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 반대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익산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새만금 메가시티 등 상생협업 방안 첫걸음 내딛어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은 5월 22일 소회의실에서 익산시의회 의장단(의장 최종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하여 김우민 부의장·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이, 익산시의회에서는 최종오 의장을 비롯하여 한동연 부의장·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환영사에서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전북자치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북이 인구 소멸·경제소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새만금 메가시티”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업 유치만 가지고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며 “익산과 군산뿐 아니라 전북의 위기를 생각해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서로 협업을 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익산시의회 의장단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도 답사에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지방자치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오늘 자리가 군산·익산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은 “군산·익산이 인구·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생활권도 가깝다”며 “군산과 익산이 지역 소멸 위기에서 통합을 목적으로 나아가간다면 군산·익산 나아가 전북 자치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산과 익산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웃이 잘되어야 서로 잘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등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산과 익산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 지역뿐 아니라 익산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메가시티 자체 용역을 하고 있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 되어 군산·익산이 형제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은 “인구감소 등 발등에 불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오늘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 간담회 개최가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며 “후반기에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군산·익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자”고 했다.

익산시의회 의장단에서는 새만금 3개 시군과 익산까지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관련해서 아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인 만큼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자고 했으며,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용역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자리가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에 대한 물꼬를 튼 자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의 미래를 그려줘!

